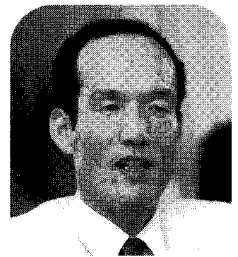




우리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해



농업정책연구소장
이헌목(李憲穆)

한농연, 한여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정부의 쌀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이 미루어졌다. 우리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을 먼저 만들고 나서 비준문제를 거론하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정부도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쌀산업보호를 위한 대책을 '보강'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농민들은 정부가 어떤 보강대책을 내놓을 지를 지켜보고 있다. 과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대책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10대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가? 과연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시 행동에 나서지 않아도 될 정도의 대책이 나올 것인가?

정부가 얘기하는 쌀 산업보호를 위한 '보강대책'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아무래도 그 모습이 농민들에게 만족스런 모습이 되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자꾸만 든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는 쌀산업보호를 위한 '보강'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을 '보강' 하겠다는 것이지,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강' 할지는 알 수 없어도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둘째, 설사 정부가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종합대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벌써 몇 차례의 종합대책을 세우고, “돈을 쏟아 부었다.” 그런데도 농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분명한 이유는 수입개방으로 농산물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영농을 규모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외소득을 증가시키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가격하락과 수요감소로 인한 농가소득의 감소를 상쇄시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거기다 도시의 근로자소득은 매년 늘어나 도농간 소득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민을 농촌에 머물르게 하고, 농업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 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이 없는 상태에서는 “근본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의 근본적인 요소는 분명하다.

첫째는 농촌에 살더라도 도시에 사는 것에 비해 삶의 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야 한다. 농촌의 삶이 도시에 비해 크게 뒤진다면 농촌에 사람이 머물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10년 후 40세 미만의 농가경영주가 2000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은 농촌의 삶의 질이 도시에 비해 크게 뒤질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농촌 농민들의 삶의 질을 그만큼 높아지게 하려면 직접지불과 농촌복지를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수입개방으로 농산물가격의 하락과 농업소득의 감소가 워낙 클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방법으로는 그것을 상쇄할 수 없다. 직접지불과 농촌복지를 대폭 확대하지 않고는 농민들의 삶의 질을 바라는 만큼 향상시킬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셋째, 직접지불금과 농촌복지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큰돈’을 들여서라도 농민들을 농촌에 머물게 하고, 농업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지하지 않으면, 결국 농업은 쇠퇴하고 농민들이 바라는 삶의 질도 확보할 수 없다. 유럽에서는 국민의 80%가 정부의 농업보조금정책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한다.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펴려 한다면, 과연 얼마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까?

‘큰돈’을 들여서라도 농민들을 농촌에 머물게 하고, 농업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공감하게 하지 못하면서도 ‘근본적인 농업회생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우리 정부와 농업계는 기회만 있으면 농업의 ‘공익적인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위해, 홍수방지를 위해, 보다 안전



한 식생활을 위해, 전통문화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 우리 농업을 유지·발전시켜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더구나 ‘큰돈’을 들여서라도 농업을 유지하고, 좀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사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될까? 그렇지 않은 일반 소비자들을 향해 그 중요한 농업의 공익성을 모른다고 나무랄 수 있을까?

농업이 단순히 국민에게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는 기능밖에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밀려올 ‘값싸고 품질 좋은’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 농업이 이런 기능밖에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리 농업은 단순한 농산물 생산·공급이외에 수입농산물이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는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그 무엇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농업이 창출하는 그 가치를 국민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수입농산물이 결코 창출할 수 없는 가치, 우리 농업만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 우리 국민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가치는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 농정과 농업계는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을 해야 한다. 수입농산물에서 기대할 수 없는 ‘100%의 안전성’,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과 내와 들, 부지

런하고 따뜻한 농심--- 산업화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신뢰와 금수강산과 농심을 회복하는 농업, 이래야 승부를 가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농업계는 한편으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을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호(6월) 퍼즐게임 정답>

	¹ 유	² 기	³ 농	⁴ 국	⁵ 유	⁶ 지
⁷ 모	순		안		정	도
내		⁸ 입	법		⁹ 조	레
¹⁰ 기	술			¹¹ 농	사	¹² 명
		¹³ 백	지	신		¹⁴ 공
		¹⁵ 풍	년		¹⁶ 보	협
¹⁷ 수		¹⁸ 해	신			¹⁹ 사
²⁰ 용	광	로			²¹ 식	물
						원